

사설

기초자료의 중요성

대한불교 조계종이 최근에 출간한 세권의 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문화재 관련 기초 자료집인 <불교사원지(상)>와 <성보문화재 지정 현황보고서>, 그리고 승가교육의 산실인 진흥강원에 관한 자료집인 <강원총림>이 바로 그것이다.

조계종이 외적 자주화와 내적 민주화의 가치를 내걸고 '개혁'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외형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실이 더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들은 바로 이러한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불교가 한국문화의 정신적 지주임을 한눈에 보여주기도 한다.

다. 불교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체계의 정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교육원에서 펴낸 <강원총림>은 한국불교사 속에서 승가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연표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불교발전의 기초가 될 세권의 자료집 출간의 뜻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계종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교문화재가 우리문화유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전체 문화재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세계적인 성지로 공인을 받은 곳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쉽게도 가려워진 불교문화유산이 너무나 많았다. 찬란했던 성보문화재와 이를 생산해 내던 수도도량이 잃어 버려지고 있어 안타깝다. 불교문화유산이 너무나 많았다. 찬란했던 성보문화재와 이를 생산해 내던 수도도량이 잃어 버려지고 있어 안타깝다. 불교문화유산이 너무나 많았다. 찬란했던 성보문화재와 이를 생산해 내던 수도도량이 잃어 버려지고 있어 안타깝다.

첫째, 실질적인 답사를 통한 생동감 있는 보고가 미흡했다.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지표조사나 가리워지고 버려진 불교문화유산의 발견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료수집과 정리에 그런 점이 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헌들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불교사원지>에 기록된 사원지의 수는 기존에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의 두배이며, 앞으로 정밀조사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교사원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잊혀져 가는 사보문화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다. 장기적인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사원지의 발굴과 복원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 조사단의 보완과 상설 연구조사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조사단에 좀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충분한 역사적 실증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종단 산하 또는 제단 법인으로서 가진 '불교문화유산연구소'를 설립하여 공신력 있는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성보문화재 지정보고서>는 단순한 현황파악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이나 단체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도 파악되었

다. 앞으로 이런 자료집들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있기를 기대한다. 충청지역, 호남지역, 제주지역의 사원지 실태를 담은 <불교사원지> 하권의 출간도 차질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무형문화유산의 현황보고서도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초한 불교계 자체의 성보문화재 지정과 관리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포교, 역경, 교육, 종무행정 등 불교발전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이나 지침서의 제작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사찰 보존구역 확대하자”

국민회의 연등회 ‘전사법개정안’ 국회제출

각종 개발로 인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와 인접 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5일 불교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개최중인 제185회 정기국회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등회 회장 박상규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부터 시행령이 효력을 갖고 있지만 개발로 인한 사찰환경의 훼손을 방지할 법적 장치는 미약해 연등회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등회가 국회에 제출한 전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에 정의하는 현행 전사법 제2조의 6에서 “전통사찰의 경내지로서”라는 부분을 “...전통사찰의 경내지 또는 경내지이외의 지역으로서”로 고쳐 전통사찰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등

을 금하는 제9조의 2항에서 현행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부분을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는...”으로 고치고 “경내지이외의 지역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에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을 들도록 함”을 신설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조성준 정한음 추미애의원등 연등회소속 20여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전사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이 규정하는 전통사찰의 보존구역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찰인근지역의 개발에 대해 문제부장관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찰환경분쟁이 건설교통부나 통산산업부등의 부처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비롯된 점을 감안할 때 문제부장관의 의견변영은 사찰환경 분쟁의 근원인원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게 연등회 의원들의 설명이다. <임연태 기자>

‘군중훈령’ 부분개정 건의

‘인가시설에만 성물 봉안’ 조항 포교 위축

국방부가 10월27일 작군에 시달한 ‘군중업무 규정령’이 군내 종교행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담았지만, 군내의 종교현황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교계의 대책이 요구된다.

규정령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가된 종교시설에만 성구·성물을 봉안·배치할 수 있다’(13조)는 조항이다. 이는 현재 군내 대대급에 인가된 법당이 한곳도 없는 불교계로서는 대대차원의 불교활동은 자동적으로 규정위반이 되는 셈이다. 또한 ‘종교시설 건립을 위해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0조)는 규정에 대해서도 군법사들은 군법당 건립불사 대부분이 화주와 사찰신도들의 협조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모금금지 및 지원장구 단절화는 사실상 법당건립 불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규정령을 신중히 검토, 문제점이 있다면 국방부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정령 제정과 관련된 국방부군중감실(실장 박성대 신부)이 9월 공청회 이후 불교측에 한번도 세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기이식법 국회통과 ‘불투명’

뇌사와 장기이식을 합법화하는 취지로 입법예고된 장기이식법이 법제처의 심사에서 ‘유족부분 동의’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 제16조

제2항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뇌사자의 장기를 유족의 동의와에 적용할 수 있다’ 부분을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장기기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게 봐 보건복지부는 내년초 공청회를 통해 논의한 뒤 다시 상정기로 했다.



△국민회의 불자모임 연등회 소속 박상규 조성준 정한음 추미애의원등은 5일 불교기자간담회에서 ‘전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역경·포교사회학과 신설

중앙승가대 내년 30명씩 모집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는 5일 교육부로부터 역경·포교사회학과 신설에 대한 인가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에따라 중앙승가대학교는 98학년도부터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각 30명을 모집한다. 또한 2개학과 신설에 따라 필요한 5명의 교원도 98년 2월까지 충원할 방침이다. 신설학과는 기존학과(불교·사회복지학과)의 정원을 각각

총지종 총리원장에 총지화 지수 선임

총지종 제11대 총리원장에 총지화 지수(62, 대전 만보사 주교)가 선임됐다. 총지종은 3일 지난 9월말 열린 임시총회에서 총지화 지수를 인준함에 이어 10월 1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총지화 총리원장은 1936년 전주 출생으로 76년 대전 만보사 주교, 89년 중앙 종의원과 충청교구장, 91년 총리원 교정부장, 94년 사강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사 고시 23일 서울등 6개도시서

조계종포교원이 실시하는 제3회 포교사고시가 23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논문고시가 폐지된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운 627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비율은 12%종 출신 불교대학에 통지한다.

종교언론인 토론회 15-16일 ‘종교화합’ 주제

한국불교기자협회와 기독교신문협회 평화신문은 10월 28일 문화체육부 주무실 초청으로 모임을 갖고 15~16일 이천 미리다호텔에서 ‘종교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 주제 토론회를 열어 토론회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

동은신부)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언론인 40여명이 참가, 박일영교수(카톨릭대)의 ‘종교와 무속’ 특강과 기독교신문 최규창 편집국장의 ‘종교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된다. 종교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간 화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찰종무원 호봉제 확산

사찰에서도 종무원 급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급여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봉은사(주지 무상스님) 전 등사(주지 장운스님) 석왕사(주지 영담스님) 보광사(주지 효림스님) 등 일부사찰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각 사찰에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무원들은 일정한 급여 기준 없이 보시금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로 인해 신임을 갖고 불교일을 하고자 들어왔던 수많은 재가 불자들이 경제적 현실에 부딪쳐 불교계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93년부터 9급공무원 급여기준에 준해 호봉제를 시행해온

봉은·전등·석왕사 등 실시 이직률 감소 종무행정 활기

마련, 상근자들에게 기본급(초임 60만원)과 4백50%의 상여금을 주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등사는 기본급(대졸초임 45만원)과 상여금 3백%, 작년에 시작한 보광사는 기본급(대졸초임 53만원)과 4백%의 상여금을 근무연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석왕사 종무원 늑은스님은 “기업체나 공무원의 봉급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며 “이제는 불교계도 안정적 재정구조를 갖춰 실력있는 인재들이 교계를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사찰 종무원은 “호봉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종무원들의 급여나 복지수준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며 “종무원을 직장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불심을 이유로 회생을 강요하는 교계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이 제도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만평

상수도공사에 절이 무너질 판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PCS 016과 함께 하는 불교통신사업입니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이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전주지사 0591-747-0106 이산행복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